



**긴급토론회**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2018년 7월 16일(월) 오후 3시~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 ▶ 사회 : 정연우(방송독립 시민행동 공동대표,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 기본 발제 : 박태순(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 사례 발표 : 언론노조 MBC본부 · EBS지부 '적폐 이사 열전'
- ▶ 제안 발표 : 오정훈(시민행동 운영위원장,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검증 기준'
- ▶ 토론 :
  -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송현준(언론노조 KBS본부 부분부장)
  - 서명준(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
  - 김연국(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 ■ 토론회 안내

- 인사말 : 박석운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대표)  
          김환균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사회 : 정연우 방송독립시민행동 공동대표(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 발제 : 박태순 박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사례발표: 언론노조 MBC본부·EBS지부
- 제언발표: 오정훈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토론
  - ▷ 정슬아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 송현준 언론노조 KBS본부 부본부장
  - ▷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
  - ▷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 플로어 토론

## [발제] 공영방송 이사선임 방식

- 공개성, 투명성, 전문성, 검증절차의 확실성 -

박태순 박사(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 공영방송 위기에 대한 언론·시민단체와 방통위의 인식 차

지난 6월 21일 241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독립시민행동’을 결성하고 방송의 독립과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KBS, MBC, EBS 이사진 구성과 KBS 후임 사장 선출에 있어서 정치권의 개입을 중단 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하나의 절충안으로 후보자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안’을 의결했다.

이 방안에서 방통위는 각 후보자들이 경력사항과 지원 동기, 업무 수행 계획, 지역 방송 등에 대한 경력 및 경험을 서술한 자료들을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민들이 후보자와 관련한 의견이나 평가를 실명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 지금까지 방통위는 이사 후보들을 비공개로 여야 정치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해왔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비춰 볼 때, 이번의 과정은 한결 전향된 모습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 추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모든 심사과정이 여전히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 직면한 현실과

우리나라 언론 상황에 대한 인식이 언론 종사자들이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방통위는 왜 이렇게 언론종사자나 시민들만큼 문제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 아니면, 인식하면서도 기존의 관행들을 깰 수 있는 역량이나 신념이 부족해서 일까? 혹은 지금의 정치 환경에 묻혀서 자신에 주어진 역할에 대한 공적 기구로서의 정체성이 미약해서 일까? 우리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하에서 방통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기존의 관행과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현재 언론 종사자들이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목소리에는 공영방송이 처한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절절히 나타나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입장’ 선언문을 보면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직 시청자인 시민뿐이다. 지난 시기 공영방송이 정치권을 대리하는 인사들로 망가지며, 정쟁의 한복판에 놓였던 역사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지난 시간 정치권에 의해 망가진 공영방송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바로 언론인과 시민들이다.

권력으로부터 언론과 공영방송을 보호해야 할 방통위도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잊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방통위 역시 정치적으로 포섭된 행정기구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의 방통위 모습을 보면, 최시중, 이경재 방통위원장 시절의 적폐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시민들은 의심스런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언론과 공영방송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신뢰 잃은 공영방송

옥스퍼드대학과 로이터가 공동으로 설립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뉴스 신뢰도는 25%로 조사 대상 37개 나라 중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이 조사는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조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뉴스의 신뢰도가 얼마나 개선 됐을까하는 의구심은 여전하다.

2018년 주요 국가 내에서 언론의 뉴스 브랜드 신뢰도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JTBC 뉴스가 6.75로 1위인 반면, KBS 뉴스는 5.45로 5위, MBC 뉴스는 5.34로 8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 공영방송의 뉴스 브랜드 신뢰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 영국은 공영방송 BBC의 뉴스 브랜드 신뢰도가 7.02로 1위, 독일은 공영방송 ARD와 ZDF의 ARD Tagesschau와 ZDF heute가 각각 7.01과 6.85로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르 몽드(Le Monde)가 6.47로 1위, 공영방송 프랑스 텔레비전 뉴스가 6.10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일본은 공영방송 NHK의 뉴스가 6.23으로 1위를 차지하였다.

KBS와 MBC의 뉴스 브랜드 신뢰도가 선진국 공영방송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선진국 국민들만큼 공영방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을까?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공영방송이 권력에 의해 얼마나 철저히 유린될 수 있는지를 경험했다. 대통령이 찍어 내려 보낸 사장이 공영방송을 통째로 권력에 바치고, 정권의 경비견으로 전락시켰다. 또한 여당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은 여당의 대변자를 자처하면서 공영방송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집권당의 부속물로 전락시켰다.

공영방송 뉴스 신뢰도 추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해버린 거버넌스 체계에 있다. 정치적 투쟁의 장이 돼버린 이사회가 지배하는 공영방송이 과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

공영방송에 대한 불신은 중국에는 공영방송의 존립 자체의 위기를 만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8'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뉴스 소비자 중 85%가 온라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으며, TV 뉴스는 74%로 나타났다. 온라인 뉴스 소비가 TV 뉴스 소비를 앞질렀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환경에서 공영방송 신뢰도 추락은 장차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뉴스 소비가 65%, 다음을 통한 뉴스 소비가 38%로 나타나서 두 포털이 실시간 뉴스 수집 사이트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축소되는 TV 방송의 위치와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공영방송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의 공영방송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그 첫 걸음이 국민이 동의하는 지배구조를 만들고 시민 친화적 방송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론당사자와 시민들이 요구하는 이사회 임명 방식에 대하여 방통위가 좀 더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향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과정은 공개성, 투명성, 전문성 그리고 확실한 검증 절차의 기본원칙 속에서 진행 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견지할 때

언론종사자들과 시민들로부터 동의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공개성이다. 후보자의 추천부터, 평가, 후보자 선임까지의 모든 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금 방통위는 공모 후보자에 대한 정보 공개 만 허용하고 있으며, 추천자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정당이나 유력 정치인에 의한 밀실 추천과 선임 관행이 여전히 진행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 방통위는 이사후보자들에게 두가지의 지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비공개용 내부 심사용 지원서와 공개용으로 국민의견 수렴용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 두 서류의 차이점은 오직 비공개용 서류에는 추천인의 인적사항과 서명란이 있다는 점이다.

추천인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말아야 할 정당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지원자의 추천인을 받는 이유는 그 당사자에 대한 인적 보증과 사회적 신뢰, 그리고 다면 평가의 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은 당연히 추천인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추천인 공개 뿐 만 아니라 세부 평가 기준, 일정, 평가 결과, 선임 절차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공영방송의 최대 주주는 시민들이며, 공영방송의 실질적 주인은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투명성이다. 이사후보자의 지원 서류제출, 심사위원 임명, 심사 등 모든 선임 과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명문화된 기준과 제도 하에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추천인의 추천 조건에 대한 명시도 필요하다. 특정 세력, 이익집단, 사회단체 등이 공영방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사를 추천하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 될 필요가 이다. 이를 통해 추천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다. 또한 평가 시스템의 명문화도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에는 공영방송 이사선임에 대한 운영규칙 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세 번째는 전문성이다. 이사후보 선임의 전문성이다. 현재 방통위는 이사후보자 평가 절차와 평가위원들에 관해서 아무 정보도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물론 방통위가 전문기관이긴 하지만 평가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이사 후보자들 뿐 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사선임의 전문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사 선임 과정에서 공영방송에 필요한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는 검증의 확실성이다. 이사후보들이 제출한 모든 자료들, 결격사항 그리고 모든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과거에 몇몇 공공기관에서 선임된 후보자에게서 추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언론·시민단체들이 7월 16일 방통위가 후보자를 공개 즉시 시민 검증 작업 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KBS, MBC본부 인력과 시민단체가 함께 검증팀 구성하고 검증 결과 부적격 후보자에 대해 시민행동의 입장을 내는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한다. 방통위는 시민단체의 검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방통위는 공영방송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인물을 선임 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 이사후보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공영방송을 올바르게 운영할 적격자에 대한 기준은 공영방송이 추구해야할 가치, 사회적 소명, 공공이익을 위한 실천 방향,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 등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지난 2015년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해 운영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후보자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한 적이 있다.

평가 요소		배점
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철학	공영철학	20
② 공영방송 보도의 공정성 및 제반 프로그램의 공적, 미적, 윤리적 기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프로그램 품질	10
③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으로서 업무이해도, 추진력, 의사소통 역량 등 업무 수행역량	이사 업무역량	10
④ 공공 부문 업무 경력 및 기여도	공적업무 경력	10
⑤ 경영진에 대해 시청자의 알권리, 여론, 불만소원을 대변하는 책무 및 상시적 감시(monitoring)를 수행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	시청자/국민대변	10
⑥ 공영방송 조직과 경영의 투명성, 자율성, 개방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주주의 역량	민주주의 철학	10
⑦ 방송법에 규정된 공영방송의 책무인 여론다양성 및 지역, 소수자, 노동, 성적 정체성 등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경력	방송법/여론다양성	20
⑧ 미디어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변화, 매체산업구조 및 문화 변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의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전문성과 식견	기술 및 미래	10
합계		100점

이 8가지 평가 기준들은 공영방송 이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적이며,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각 이사들은 공영방송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각자의 전문적 소양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예산 및 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 지역방송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 방송기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 문화예술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 장애인 및 사회적 소수자, 여성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사 등과 같이 공영방송이 공익적 방송활동을 하고, 균형있는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다양한 소양을 갖춘 재원들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는 평가 기준들도 필요하다.

현대사회의 민주적 정체를 설명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미디어 민주주

의(Mediacracy)’ 다. 모든 민주적 담론의 생산, 정치적 논쟁은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미디어에 의해서 실현된다. 미디어는 매체이자 소통 망이다. 그러므로 민주적인 미디어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다. 오늘날 공영방송을 되살리고, 정상화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되살리는 것은 우리사회의 민주주의를 건강하기 지키는 처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의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는 공영방송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출발이라 할 수 있다.

방통위가 변화하는 사회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로부터 독립된 공영방송 거버넌스 체제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민주적 이사 선임, 정치로부터 독립된 이사 선임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자기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으로(정치적으로가 아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사례발표]**

- 적폐 이사 열전 동영상(언론노조 MBC본부)
- 적폐 이사 열전(유규오 EBS지부장)

# [제안발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및 검증 기준

오정훈 방송독립시민행동 운영위원장(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1. 공영방송 지배구조

지상파 3사(KBS, MBC, EBS)의 지배구조를 들여다보면 모두 공적자금으로 구성된 대주주, 즉 이사회가 그 최상위 구조에 자리하고 있다. 한국방송공사는 KBS이사회, 문화방송은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은 EBS 이사회로 일컬어지는 대주주의 지배를 받고 있다.

KBS 이사회의 경우 비상임 이사 11명으로 구성되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송문화진흥회는 상임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를 방통위가 직접 임명하게 되어있다. EBS는 비상임이사 9명을 방통위가 임명하고 그 중 교육부장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추천 각 1명이 포함되어야한다.

임기 3년의 이사들은 각 공영언론사의 독립성, 기본운영계획, 회계, 결산, 경영평가 및 공적책임 이행 감시 등의 임무를 맡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를 지닌다.

## 2. 공영방송 이사선임 무엇이 문제인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1980년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공영방송체제를 출범시켰던 역사를 돌아보면 이것이 진정 언론의 공공성에 기반을 둔 공영언론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권력에 의한 군사정권의 언론 장악 프레임에 ‘공영방송’이라는 허울로 포장하고 국회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집권여당이 추천하는 이사진을 허수아비 삼아 종합편성 지상파 채널을 장악하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었다.

또한, 공영방송 이사회를 규정한 법령의 취지가 지상파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자격조건을 적시하기보다 결격사유만 나열하고 있다. 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정

당가입, 공직퇴직, 대선캠프 고문 역할 수행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선임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법 규정과는 무관하게 집권 세력과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KBS이사회는 경우 전체 이사 11명 중 여당 추천 7명, 야당 추천 4명, 방송문화진흥회는 여당 6명, 야당 3명이 관행적으로 추천하거나 선임해 방송 관련 전문성, 언론 독립과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철학에 대한 검증에 기반을 둔 이사 선임 절차가 과연 존재해왔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심지어 지난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들은 방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라기 보다 특정 이데올로기에 편향된 인사들이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한 업무추진비를 애견활동에 사용하거나 지급 취지에 맞는 곳에 사용했는지 증빙을 요구하는 감사원 요구에 답하지 못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 3. ‘정치권 이해관계’의 사슬을 끊어야

아래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추천의 법적 근거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정치권이 이사 선임과정에서 개입할 여지는 없다. 또한 지상파 3사의 운영을 규정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어디에도 정치권이 이사를 추천한다는 조항은 없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약칭: 방통위법)

제1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회는 소관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2.>

1.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3.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4.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공영방송 체제를 갖추고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공영성을 기반으로 정치권의 개입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고 있다.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언론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한다. 지난 시기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논의에서 ‘정치권 개입’의 악습을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고 이른바 중립시대 추천 못 늘리기 등을 현실적인 안이라고 제시했던 것에 머문다면 정파적 이해관계의 사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 4. ‘정치권을 배제한 공영방송 이사추천’, 새로운 시대적 요구

정치권이 실질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방통위가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공영방송이사 선임 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방통위 스스로가 법이 정한 원칙에 따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사 추천과 임명을 진행해야한다.

2018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서 정치권의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공개성과 투명성 원칙 아래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방통위가 후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국민의견을 청취하겠다고 했지만 결정단계에서 어떤 기준과 토론을 거치는지는 여전히 캄캄하다. 방송독립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요구한 ‘시민검증단’ 운영을 방통위가 거부한바 자체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제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위와 같은 원칙에서 시민행동이 제시하는 공영방송 이사의 자격 요건과 검증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018년 방송독립시민행동 제시 공영방송 이사 자격과 검증 기준(안)

자격 조건과 검증 기준	
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사회적 책무에 대한 철학	방송의 독립성
②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	공영성
③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으로서 공영방송 조직과 경영의 투명성, 자율성, 개방성을 증대할 수 있는 민주적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	이사 업무역량 / 민주주의 철학
④ 미디어 기술발전에 따른 시장변화, 매체산업구조 및 문화 변동에 대한 이해	업무전문성
⑤ 공공 부문 업무 경력 및 이해도	공적업무 경력과 이해
⑥ 경영진에 대해 시청자의 알권리, 여론, 불만소원을 대변하는 책무 및 상시적 감시(monitoring)를 수행할 수 있는 헌신과 열정	시청자/국민대 변
⑦ 방송법에 규정된 공영방송의 책무인 여론다양성 및 지역대표성	방송법/ 여론다양성
⑧ 소수자, 성적 정체성 등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경력	다원적 가치
⑨ 성/평등한 가치 실현 및 조직문화 개선 실천경력과 의지	성평등
⑩ 방송 종사자의 제작 자율성 보장, 공정성 보장 장치로서의 노사관계 이해	노동존중

## [토론문] <공영방송 이사의 조건>

정슬아(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사무국장)

- 발제문에서 언급된 공영방송 이사선임 방식의 '공개성, 투명성, 전문성, 검증절차의 확실성'에 대한 기본원칙에 동의하는 바임.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이라는 공영방송 정상화의 흐름 속에서 놓치거나 사소화되지 않아야 할 주요한 과제로 성평등 부분이 있을 것임. 이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있어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중요하게 평가함과 더불어 성평등 구현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자 함.

### ○ 다양한 이사회 구성을 위한 노력 : 성비, 지역, 연령 등

#### 1) 특정성별 과대대표성 해소

: 현재 공영방송 KBS, MBC, EBS 이사회의 여성비율은 29명 중 2명에 불과함. 「양성평등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절대적인 성비차이는 개선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임.

: 이사회의 성비를 포함해 방송사 사장, 기타 임원이나 인사위원회 등 주요결정권을 갖고 있는 고위직의 대부분이 남성들로 이뤄져 있어 성평등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저조함. 따라서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구성원들의 경우 승진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제되는 이유가 되기도 함.

: 미디어 내 성평등이 남성이 대부분인 공영방송 이사진 성비 불균형 해소를 당장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님. 하지만 특정성별이 과도하게 대표되지 않도록 이사 임명에 있어 제한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남성중심 문화인 방송사의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음. 이사진 구성 성비의 가시적 변화는 그 외 주요 결정권을 가진 임원진 성별구성의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임.



## 2) 지역대표성과 사회 각 분야 특성 반영

: 성비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과 사회 각 분야가 전체 구성원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등 이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한 특성과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후보자 평가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임. 또한, 기존 이사회 구성원 중 50대 이상의 연령대가 전원임을 볼 때, 이사진이 다양한 세대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이 높은 만 39세 이하 후보자에게는 가산점(10점)을 부여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음.

### ○ 방송사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마련을 위한 노력

: 미투(MeToo)국면에서 KBS 기자 3명이 사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이야기 함. 그러나 KBS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가시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음. 심지어, 사내 성추행 사건 감사를 가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도 함. 7월중 사내 성평등기구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나 성평등센터를 ‘생활보복기구’ 라고 주장하는 일부 구성원의 의견이 버젓이 존재하는 것은 방송사 내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와 조직문화 점검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음.

: MBC는 올해 들어 성폭력 관련자 4명을 해고함. 또한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폭력 내규도 강화하여 예방에도 나서고, 사내에 ‘MBC 클린센터’를 만들어 성폭력 관련 사건을 접수하고 해결에 나서기로 함. 하지만 해고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임. 무관용 원칙도 중요하지만 성폭력은 성차별적인 조직문화에서 기인함을 인식하고, 사내에 어떻게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고 확산 할지에 대한 치열한 자기반성을 포함한 성찰과 더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

: 성차별적인 조직문화는 비단 사내 구성원 간의 문제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 제작과정의 전반을 비롯해 프로그램 내용 등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조직문화 개선은 성평등한 미디어를 위해 절실함. 최근 들어, 방송사 내의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담 처리 기구를 신설하거나 관련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러한 흐름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보다 실효성을 발휘하

기 위해서는 이사진을 비롯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고위직 구성원의 변화와 의지가 동반될 때 지속될 수 있을 것임.

## ○ 나가며

: 방송사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 형성과 방송사 콘텐츠 전략 구성에 있어 이사진의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 성평등에 대한 관점과 태도는 매우 중요함. 공영방송의 역할로서 성차별,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선도하고,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는 이사후보 평가 과정에서 주요한 항목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는 미투(MeToo)운동으로 촉발된 일상 속의 성차별,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각 영역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음.

: 이에, 이사 임명에 있어 특정성별 초과 제한기준을 적용함과 동시에 발제문에서 소개된 지난 2015년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구성해 운영한 ‘공영언론이사추천위원회’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심사기준>에 포함된 여론다양성 확보를 위한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방송법에 규정된 공영방송의 책무인 여론다양성 및 지역대표성’, ‘소수자, 노동, 성적 정체성 등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천 경력’으로 세분화하고, ‘성/평등한 가치 실현 및 조직문화 개선 실천경력과 의지’ 등의 항목을 신설하여 심사하고 선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토론] 송현준 언론노조 KBS본부 부분부장**

**[토론] 서명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대표**

[토론]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 본부장

[MEMO]